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장
jgkim@kiep.go.kr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백종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이선형 몽클레어 주립대학교(美)
경제학과 교수
lees@montclair.edu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인도의 개방화 정책은 투자 활성화 및 개방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초점
 -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냄.
 -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지속
- ▶ 인도는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짐.
 - 인도의 주요 무역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
 -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는 인도 국내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인도의 대한민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추세
- ▶ 인도는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FDI 유입이 증가
 - 인도의 FDI 유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며, 최근 브라운필드 투자가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임.
 - 한국의 대인도 FDI는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
- ▶ 한국과 인도는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큼.
 - 양국의 무역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향적 관점으로 CEPA 개선협상 재개
 - 한국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으로 대인도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
 - 양국간 포괄적인 통상협력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여 서로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발굴
 - 한국정부는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노력할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인도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 체결,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성장 중이나, 양국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
 - 무역의 경우 아세안이 한국의 2위 파트너인 반면 인도는 10위권이며,¹⁾ FDI의 경우 아세안은 2010년 이후 연간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2~3위 투자대상국인 반면, 인도는 2010년 21위에서 2018년 12위로 올라섬.²⁾
 - 인도는 향후 연평균 6%의 성장률을 통해 2031년까지 전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전망³⁾
-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 심화에 기여
 - 인도는 미·중 갈등,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건하에서 제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음.
 - 본 연구에서는 ① 1990년대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인도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 ② 최근 인도의 무역 및 투자구조,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상국별 특징 ③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인도의 위상 및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여 ④ 한국과 인도의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인도의 개방화 이후 통상정책

① 1990년대 개방화

- 인도정부는 수입제한을 통해 외환 보유고를 관리한다는 과거의 정책에서 탈피, 수입 개방화 및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수출 촉진으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선회
 - 기존의 통제적인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 공기업의 지대추구행위를 막고 경쟁을 통해 민간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1. 11. 22).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검색일: 2021. 11. 22).

3) CBER(2020),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1," p. 16.

- 1991년 이후 수입 관세율을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하였음.
 - 1990~91년 당시 인도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125%였으며, 소비재의 수입가중평균 관세율은 153%, 중간재는 77%, 자본재는 97%에 달하였는데,⁴⁾ 개방화 이후 이를 대폭적으로 낮추었음.

●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 시 연방과 기업의 의견 조율이 중요

- 인도는 연방국가로서 헌법 246조(Seventh Schedule of the Constitution)에 따라 연방정부와 개별 주의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으며, 주정부의 권한이 큰 것이 특징
 - 예컨대 농업정책은 각 주별 책임 영역으로서,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연방정부의 상무부는 농업부, 식품산업부와의 의견 조율은 물론,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주정부와의 논의가 필수⁵⁾
- 1990년대 개방화 이후 민간 협의 절차가 강화
 - 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상무부 산하 기관(FIEO: 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zation, 수출촉진위원회 등), 또는 부문별 민간단체를 통해 상무부에 영향력을 행사

② 개방화 이후 상품 무역정책

● [관세율] 개방화 이후 인도는 주요 제조업의 관세 감축을 달성, 최근 관세율을 인상하는 추세

- 2018년을 기점으로 평균 MFN 관세율이 상승하였는데(그림 1과 2 참고), 이는 최근의 경제적 자립 기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인도의 평균 관세율 추이(2014~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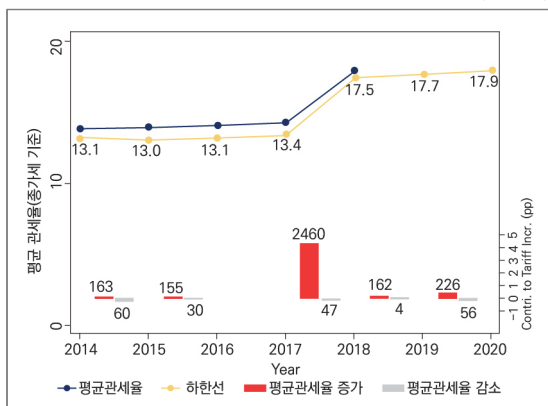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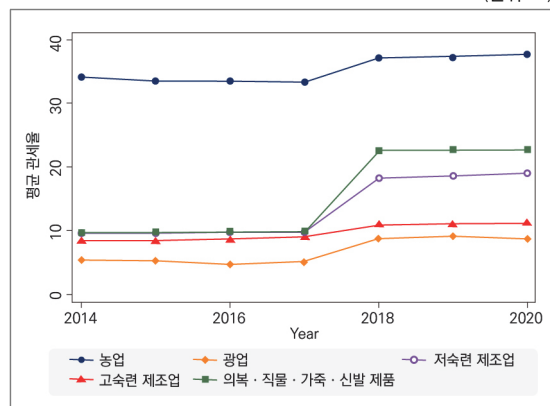


그림 2. 인도의 산업별 평균 관세율 추이(2014~20년)

(단위: %)



주: HS 6단위 품목 기준.

자료: Chatterjee, Shoumitro and Arvind Subramanian(2020), "India's Inward (Re)Turn: Is it Warranted? Will it Work?" Policy Paper, No. 1, Ashoka Centre for Economic Policy, Ashoka University, pp. 5-6.

4) Roy, Jayanta, Pritam Banerjee, and Ankur Mahanta(2014), "Historical development of Indian trade policy and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hoices on present time," pp. 25-2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 Singh, Surender and Ram Singh(2020), "Domestic Sources of India's Trade Policy Preferences in RCEP Negotiations," *Journal of World Trade*, 54, No. 4, pp. 503-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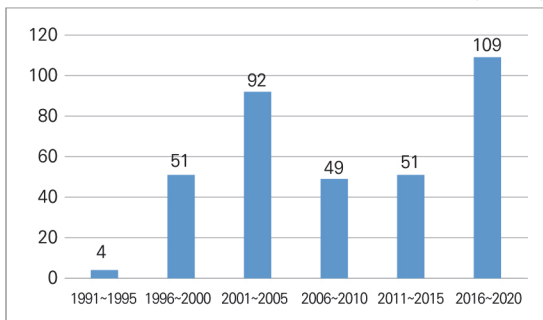
- 2020/21년 현재 운송기기의 경우 최대 100%, 가죽제품 70%, 기타 제품 60%, 광물 40%, 섬유 35%, 화학 및 기계류 20% 등 관세율의 적용 폭이 매우 큰 편⁶⁾
- 한편 WTO 분류 비농산물의 경우 무관세 품목의 비중은 1.8%에 불과(HS 6단위 기준)

● [비관세장벽] 관세 감축의 반대 급부로서 반덤핑 조치, TBT 등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

- 2000년대 초반 이후, 특히 모디 정부(2014년 출범)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용(그림 3 참고)
- 국가별로는 최근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 EU,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큰 비중을 차지
- 인도는 TBT 관련 STC(Specific Trade Concern) 제기를 많이 받는 국가로서, 1995~2020년간 총 235회의 STC 제기를 받았음.

그림 3. 인도의 반덤핑 조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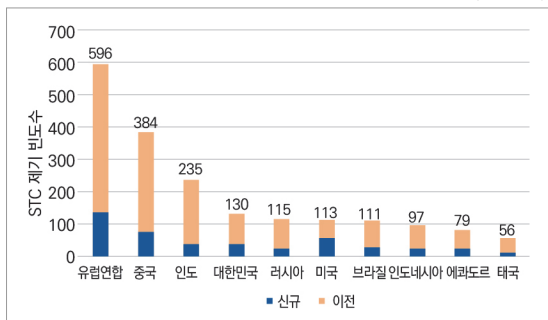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nti-Dumping Cases"(검색일: 2021. 5. 12).

그림 4. 국가별 STC 제기 빈도(1995~2020년)

(단위: 건)



자료: WTO(2021), "Twenty-Six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Note by the Secretariat," p. 33.

③ 개방화 이후 FDI 정책

● 수입에 대한 보호주의적 성향에 비해 FDI에 대해서는 개방화를 지속

- 모디 정부 이후 투자환경 개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표에서 인도의 순위는 2017년 130위에서 2020년 63위로 상승
- 국방·디지털 미디어·멀티 브랜드 소매·제약(브라운필드)·통신 서비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 규제를 크게 완화(표 1 참고)
- 한편 인도는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간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중단한 상태로 서, 한국과의 협정은 2017년 5월 만료⁷⁾

6) WTO(2021),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India*.

표 1. 업종별 인도의 FDI 규제

(단위: %)

업종	자동승인	정부승인	업종	자동승인	정부승인
항공 운송 서비스(민간 항공 부문의 비정기 및 기타 서비스)	100%	.	의료(그린필드)	100%	.
항공 운송 서비스(정기 항공 운송 서비스, 지역 항공 운송 서비스)	최대 49%	49% 초과	보험	최대 100%	.
공항(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100%	.	IT 및 BPM(비즈니스 서비스)	100%	.
자동차부품	100%	.	가족	100%	.
자동차	100%	.	의료 기기	최대 100%	.
생명공학(브라운필드)	최대 74%	74% 초과	금속 및 비금속 광석 채광	100%	.
생명공학(그린필드)	100%	.	티타늄 함유 광물 및 광석 채광, 광물 분리 및 기타 산업활동	.	100%
방송 콘텐츠 서비스(비'뉴스 & 시사' TV 채널 업링크/TV 채널 다운링크)	100%	.	멀티 브랜드 소매 거래	.	51%
방송 운송 서비스	100%	.	민간 항공 부문 기타 서비스(정비 및 수리, 비행 및 기술 훈련)	100%	.
방송 콘텐츠 서비스	.	49%	민간 항공 부문의 기타 서비스(부문별 규정 및 보안 허가에 따른 자상조업 서비스)	100%	.
자본재	100%	.	석유 및 천연 가스	100%	.
대형 할인매장(중소기업 소싱 포함)	100%	.	석유 정제(PSU 기준)	49%	.
화학	100%	.	제약(브라운필드)	최대 74%	74% 초과
석탄 및 갈탄	100%	.	제약(그린필드)	100%	.
건설업(주택, 인프라)	100%	.	항구 및 배송	100%	.
병원 건설	100%	.	인쇄매체(과학기술잡지 출판/인쇄/전문잡지/정기간행물 및 외국신문의 팩시밀리판)	.	100%
국방	최대 74%	74% 초과	인쇄 매체(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외국 잡지의 신문, 정기간행물 및 인도판 발행)	.	26%
디지털 미디어	.	최대 26%	철도 인프라	100%	.
면세점	100%	.	재생 에너지	100%	.
전자상거래	100%	.	도로 및 고속도로	100%	.
전자 시스템	100%	.	단일 브랜드 제품 소매 거래	100%	.
식품 가공	100%	.	통신 서비스	최대 49%	49% 초과
식품 소매업	100%	.	섬유 및 의류	100%	.
보석(제조)	100%	.	화력	100%	.

자료: DPIIT(2020), "Consolidated FDI Policy," p. 14.

7)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BIT, <https://dea.gov.in/bipa>(검색일: 2021. 10. 19).

④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는 인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우선적인 과제로서 강조하여 투자 자유화 및 사업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반면 ‘자립’ 기조를 무역정책에 반영하면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임.
-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를 통해 중점 육성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및 자국기업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집중
 - PLI는 배터리, 전자, 특수강, 태양광, 제약원료, 농업가공 등 14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인도 내 추가 생산된 금액의 4~6% 정도를 현금으로 환급⁸⁾
- 인도는 중국 의존도 완화와 글로벌 GVC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인도는 쿼드(QUAD) 참여, 일본, 호주와 함께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 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출범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상 제고에 노력을 기울임.⁹⁾

● 최근 인도는 균형 있는 양자간 무역관계 수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인도는 대중국 무역적자 심화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덤핑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인도는 FTA를 특혜관세를 적용 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에 FTA 협정문상 원산지제도의 준수여부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¹⁰⁾
 - 또한 2020년에는 중국을 타깃으로 한 투자 심사제도 도입¹¹⁾
- 한국도 무역불균형 해소의 대상 국가가 되고 있어, 이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 영향을 줌.
 - 대한민국 무역적자가 커지면서 인도는 한·인도 CEPA를 통한 자국 이익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주장
- 일본의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대인도 경제관계 구축을 통해 무역불균형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됨.

8) 김문영(2021. 9), 「GVC 개편에 대한 인도정부 및 산업계 대응노력」, 『남아시아 이슈페이퍼』, Vol. 8,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9) 김정곤(2021), 「쿼드 및 미국-인도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 평가」,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인도 정부는 2020년 “관세(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 규칙, 2020(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약칭 CAROTAR 2020)”을 도입함. 도입 목적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 준수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특혜를 제3국이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서,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겠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임.

11) 인도 정부는 2020년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등의 육로 접경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기업에 대한 견제 조치로 해석됨. DPIIT(2020), “Consolidated FDI Policy.”

2) 인도의 상품무역 구조¹²⁾

① 전체적 상품무역 구조의 특징

● 2000년대 이후 인도의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

- 2003~19년간 인도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2.5%로 수출증가율 11.2%보다 높았음.
-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세계 수출은 3,233억 달러, 수입은 4,789억 달러로 1,556억 달러 적자이며, 최대 적자국은 중국이고 그 밖에 중동 국가, 스위스, 한국 등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

● 인도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중간재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수출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입은 북미·유럽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상대국이 변화

- [수출] 50~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의 대표적 품목으로는 석유조제품,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터보제트를 들 수 있으며, 30% 비중인 소비재의 경우 의약품과 귀금속이 주요 품목임.
- [수입] 중간재의 비중이 50% 내외로 가장 컸고, 원유와 원석의 수입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보다 중간재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

● 현재 인도 무역의 중심 영역은 1) 수입 원유로 조제한 석유정제품 수출 2) 수입 다이아몬드·금·은을 가공한 귀금속 수출 3) 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에서의 산업내 무역임.

- [수출] 2000년대 이전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귀금속 제조업과 섬유제품 제조업이 중심이었으나 이후에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산업과 석유정제품 제조업으로 진화함.
- [수입] 원료 및 천연자원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화학산업과 1차금속(철강, 알루미늄) 산업의 산업내 무역이 증가하며 원자재 수입비중은 감소세임.

● 인도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와는 중간재 교역을 통해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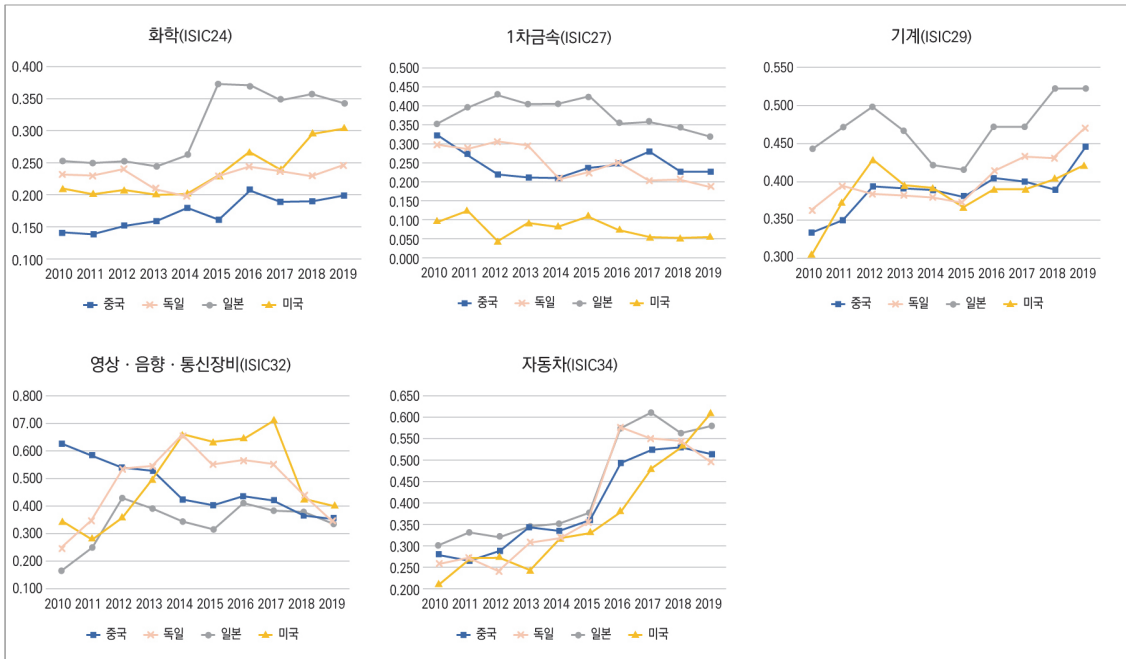
- 인도의 상대국별 무역결합도는 부탄과 가장 높고, 다른 상위권 국가 역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임.
 - 이 국가들은 인도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며, 인도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원유, 금)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
- 인도와 아세안 간의 수출에서는 석유조제품의 비중이 높고 터보제트, 화학물질, 철강과 같은 다양한 중간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에서는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 부품품 등 전자기계 산업에서 필요한 중간재를 다수 포함함.
 -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화학 및 전자기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 중임.

12) 본 절은 UN COM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② 한·인도 상품무역 구조의 특징

- 인도와 한국 사이의 상품무역은 2000년대 접어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그 규모는 6.8배 증가했으나, 한·인도 CEPA 발효 전후 수출입 추이는 다소 상이함.
 - [수출] 한·인도 CEPA 발효 전(2003~09년) 연평균 증가율은 33.6%로 동 기간 대세계 19.9%보다 성장세가 컸으나 CEPA 발효 후(2010~19년)에는 대한민국 2.8%, 대세계 4.3%로 대한민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
 - [수입] 한·인도 CEPA 발효 전 인도의 대한민국 수입은 연평균 22.7% 증가, 대세계 수입은 24.2% 증가하였으나 CEPA 발효 후에는 대한민국 5.5%로서, 대세계 증가율 3.5%를 상회함.
 - 즉 한·인도 CEPA 발효 후 인도는 대한민국 수출보다 수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결과가 양국이 CEPA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됨.
- 인도의 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중간재의 비중이 압도적(2019년 기준 80% 상회)인데, 이는 인도의 무역상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수출] 철강제품을 대표적인 중간재 수출품목으로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차금속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수출을 주도함.
 - [수입] 메모리, 자동차부품, 석유조제품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입이 많음.
- 한·인도 CEPA가 실제 양국간 무역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임.
 - CEPA 발효 이후 10년 평균 기준 상대국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거나 양허 제외된 품목의 수입 협정 발효 전후 큰 차이를 보이거나 관세가 철폐된 품목보다 감축된 품목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경우도 발견됨.
 - 그러나 동 협정은 양국간 수입에서 품목의 다양성을 높여준 계기가 되었는데, CEPA 발효 이후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새롭게 수입한 품목은 HS코드 6단위 기준 637개, 한국이 인도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982개임.
-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 수출구조를 비교해보면,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수출산업에서 한국은 일본과 높은 경합도를 보임.
 -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산업인 화학 및 1차금속 제조업은 물론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합관계가 두드러짐.
 -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는 미국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큰 가운데 주요국과의 경합도가 최근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점차 디지털 전자집적회로 위주로만 수출하기 때문

그림 5.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지수 비교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9. 30)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인도의 투자 · 서비스 무역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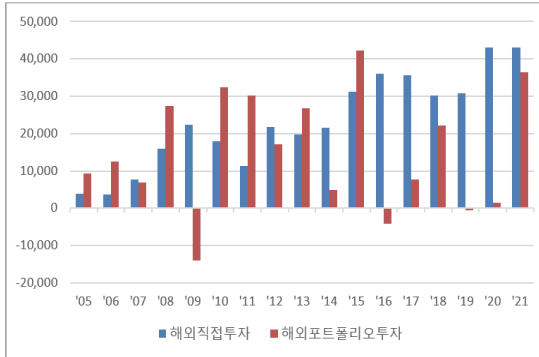
① 투자관계의 특징

- [전 세계]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
 - 대인도 투자유입액은 2000년 약 51억 8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0년 504억 달러, 2021년 794억 달러 규모로 대폭 증가
 - 주요 대인도 투자국은 모리셔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등이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무역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인도 국내 지역별로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델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등 투자유치 편중 현상이 뚜렷함.
 - 최근 5년간 신규 브라운필드 투자유치는 건수 및 규모 측면에서 과거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신규 그린필드 투자유치는 금액 측면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브라운필드 투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건수 측면에서는 감소세를 보임.

13) 투자는 DPIIT, RBI, CEIC, fDi Markets, Refinitiv Eikon의 데이터, 서비스무역은 WTO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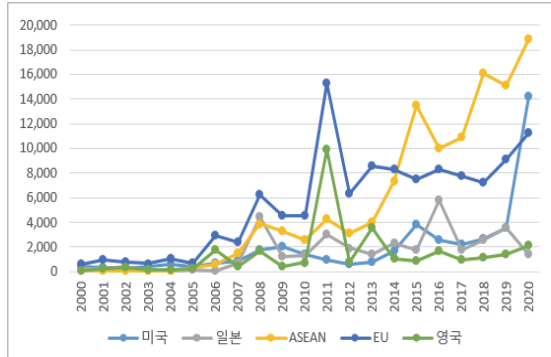
- 또한 최근 5년간 제조업 투자는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부동산 및 각종 서비스업 관련 투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대인도 FDI 및 해외포트폴리오투자(FP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RBI 및 CEIC.

그림 7. 주요국의 대인도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DPIP 및 CEIC.

- [주요국] 미국은 IT 및 디지털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최근 대인도 투자를 크게 늘렸으며, 대인도 최대 해외직접투자 주체인 아세안도 최근 수년간 서비스, 무역,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가 급성장
 -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EU는 2018년부터 서비스, 화학,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를 큰 폭으로 늘려왔으며, 영국도 인도와 상호간 견조한 투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자동차, 서비스, 의약 및 제약을 중심으로 인도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5년경부터 스타트업 등 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임.
 - UAE의 대인도 투자는 해운운송, 전력,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전개
- [한국]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제조업 분야 국내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시작했으며,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양국간 교류여건의 개선을 토대로 최근 더욱 본격화
 -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2010년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과자류 등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도 제조업 편중현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등에도 투자
 -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무역, 건축 및 개발 등을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전 세계의 대인도 투자 트렌드와 대조적

② 서비스 무역의 특징

- [전 세계] 인도의 서비스 무역규모는 2019년 기준 2,700억 달러이며, 인도는 2010~19년 기간 수출 및 수입액이 각각 80%, 69% 성장하며 서비스 무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
 - 2010~19년 인도는 매년 서비스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면서 꾸준히 흑자 기조
 - 주요 서비스 수출대상국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홍콩, 중국, UAE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영국, 중국, 독일 등
 - 인도의 주요 서비스 수출 분야는 통신·정보, 수송·운송, 관광 등이며, 수입 분야는 관광, 수송·운송, 기타 비즈니스 등
- [주요국] 미국과 유럽 국가와 같은 전통적 무역상대국 이외에, 일본, 중국 등과의 무역이 활성화
 - 대EU와 대영국 서비스 수출에서는 기타 비즈니스의 비중이 각각 44%, 56%로 높게 나타났고, 대EU 서비스 수입에서는 통신·정보 비중이 21.7%로 높은 반면 영국으로부터는 기타 비즈니스 분야의 수입이 활발한 것이 특징적
 - 대미국 서비스 수출에서는 통신·정보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점과 R&D, 전문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기타 상업서비스 수출이 활발한 점이 특징적이며, 서비스 수입에서는 관광과 지식 및 지적재산의 비중이 매우 높음.
 - 과거 전문직 취업비자 등을 통한 인도의 대미국 서비스 진출이 활발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인·미 간 서비스 시장 개방 및 데이터 규제 등의 통상 이슈가 대미국 서비스 수출에 제한요인으로 작용
 - 대일본 서비스 수출은 통신·정보 및 기타 비즈니스 등의 분야 주도로, 수입은 지식 및 지적재산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 대중국 서비스 수출은 수송·운송 및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수입에서는 수송·운송의 비중이 높고 통신·정보, 지식 및 지적재산의 수입은 저조
 - 아세안에 대해서는 통신·정보, 기타 비즈니스, 수송·운송,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서비스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음.
- [한국] 한·인도 간 서비스 교역액은 2019년 기준 62억 2천만 달러로, 2015~19년 기간 인도의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 및 수입은 각각 26%와 29% 증가
 - 특히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한국과 인도가 각각 104개, 81개 서비스 영역을 개방함으로써 양자간 서비스 교역 심화의 발판이 된 것으로 평가
 -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은 기타 비즈니스 및 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의 대한민국 서비스 수입에서는 수송·운송의 비중이 34.6%로 높은 반면, 관광과 통신·정보는 주요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 한국으로부터의 지식 및 지적재산권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4)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¹⁴⁾

① 용도별 수출 구조

- [인도의 중간재 수출] 인도 제조업은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미국과 독일에 대해서는 제조업 이외에 농업, 광업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함.
 - 인도의 대미국 수출에 있어 코크스 석유 정제업, 대독일 및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자동차 운송 제조업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함.
- [인도의 최종재 수출] 인도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임.
 - 인도의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은 네 국가에 대하여 모두 최종재 수출 비중이 증가함.
 - 인도의 섬유·의복 제조업 수출은 대중국 수출에,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은 대일본 수출에, 1차 금속, 화학,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은 대베트남 수출에, 운송, 화학 제조업은 대한민국 수출에 대한 최종재 수출 비중이 증가함.
- [대인도의 중간재 수출] 분석 대상 7개국은 모두 인도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
 - 중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고, 미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표 2. 인도, 대인도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비중 증가국

인도 주요 중간재 수출 비중 증가국	인도 주요 최종재 수출 비중 증가국
① 대미국: 농업/광업, 제조업 (인) 코크스 석유정제업, 기타제조업 ② 대독일: 농업/광업, 제조업 (인) 섬유·의복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③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인)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① 대중국: 농업/광업, 제조업 (인) 섬유·의복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② 대일본: 농업/광업, 제조업 (인)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식료품 담배 제조업 ③ 대베트남: 농업/광업, 제조업 (인) 화학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기타 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④ 대한민국: 농업/광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인)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화학제조업
대인도 주요 중간재 수출 비중 증가국	
① 미국: 대인도 전 산업 (미)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제조업 ② 중국: 대인도 농업/광업, 제조업 (중) 전자 부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③ 독일: 대인도 제조업, 사업/개인서비스업 (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④ 일본: 대인도 제조업, 사업/개인서비스업 (일)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⑤ 인나: 대인도 제조업, 사업/개인서비스업 (인나)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⑥ 베트남: 전 산업 (베트남)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⑦ 한국: 전 산업 (한)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화학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주: 대인도 주요 최종재 수출 비중 증가 국가는 없음.

자료: 본 연구를 토대로 저자 작성.

14) 본 분석은 ADB에서 제공하는 국제산업연관표(ADB-MRIO)의 2009년과 2019년의 데이터를 활용함. 인도와 생산 측면에서의 연계성이 높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총 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함.

- 베트남, 한국은 제조업과 함께 농업·광업, 사업·개인 서비스업에서 중간재 비중이 늘어남.
- 대부분의 국가는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을 바탕으로 중간재 비중이 확대되는 중이며, 한국은 이와 함께 화학 제조업 중간재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중간재 비중이 증가

② 수출 내 부가가치 구조

- 인도의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출에는 인도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인도의 대미국, 중국, 일본 수출에는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
 - 이는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인도 국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함.
- 대다수 국가의 대인도 수출은 해외 중간재에 대한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중국 자국 생산 중간재가 활용된 점이 특징
 - 중국을 제외한 인도 생산 연계국은 중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중간재를 조달 받아 인도로 수출하기에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중국은 자국 생산 중간재를 인도에 직접 수출할 수 있기에 중국의 대인도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표 3. 인도, 대인도 수출 내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인도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인도 수출 내 해외 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대인니, 대베트남, 대한민국	대미국, 대중국, 대일본, 대베트남
대인도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대인도 수출 내 해외 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니, 베트남, 한국

자료: 본 연구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③ 생산 및 수출 기여도

- [인도의 대세계 생산 및 수출 기여] 인도는 독일과 미국 제조업에 대한 생산·수출 기여도가 증가
 - 수출에 있어 인도의 화학 제조업은 미국과 독일의 화학 제조업 수출에 대한 기여가 증가하였고, 생산 측면에서는 인도의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미국과 독일의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지원이 향상됨.
 -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인도의 중간재 수입 활용에 활발한 모습을 보임.

- [주요국의 인도 생산 기여] 주요국은 인도의 사업서비스업(육상운송 서비스업 중심) 생산에 대한 기여가 증가
 - 미국, 독일, 한국은 본국의 자동차 운송 제조업과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일본은 1차 금속 제조업과 코크스 석유정제업, 중국은 도매업, 광업, 금융 보험업에서 인도 육상운송 서비스업 생산에 기여
 - 특히 최근 독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제조업과 더불어 도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을 바탕으로 인도 육상운송 산업 생산에 기여함.
- [주요국의 인도 수출 기여] 주요국의 대인도 수출 기여는 모두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
 - 중국, 일본, 한국은 본국의 제조업, 미국과 독일은 제조업과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인도네시아는 광업을 바탕으로 인도 제조업 수출에 기여함.
 - 특히 일본의 1차 금속 제조업은 인도의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에서 활용되며, 베트남의 섬유, 의복 제조업은 인도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에 적극 활용되는 모습을 보임.

표 4. 인도, 대인도 주요 생산기여 국가 및 산업

인도 주요 생산기여 국가 및 산업	인도 주요 수출기여 국가 및 산업
① 대미국: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인)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미)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 서비스업 ② 대독일: 제조업 (인) 화학제조업 → (독) 화학제조업 (인)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① 대미국: 농업/광업, 제조업 (인) 화학제조업 → (미) 화학제조업 ② 대독일: 제조업 (인) 화학제조업 → (독) 화학제조업
대인도 주요 생산기여 국가 및 산업	대인도 주요 수출기여 국가 및 산업
① 미국: 대인도 사업서비스업 (미)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도매업 → (인) 육상운송 서비스업 ② 중국: 대인도 사업서비스업 (중) 자동차 운송 제조업, 도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 (인) 육상운송 서비스업 ③ 독일: 대인도 사업서비스업 (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인) 육상 운송업 ④ 일본: 대인도 사업서비스업 (일)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 (인) 육상 운송업 ⑤ 인나: 대인도 사업서비스업 (인나)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 (인) 숙박 및 음식점업 ⑥ 베트남: 대인도 제조업 (베트남) 섬유, 의복 제조업 → (인) 섬유, 의복 제조업 ⑦ 한국: 대인도 사업서비스업 (한)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육상 운송업	① 미국: 대인도 제조업 (미)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인)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② 중국: 대인도 제조업 (중) 화학제조업, 섬유 의류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 (인) 화학제조업, 섬유 · 의류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③ 독일: 대인도 제조업 (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 (인)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④ 일본: 대인도 제조업 (일) 1차 금속 제조업 → (인)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⑤ 인나: 대인도 제조업 (인나) 광업 → (인)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⑥ 베트남: 대인도 제조업 (베트남) 섬유, 의복 제조업 → (인) 섬유, 의복 제조업 ⑦ 한국: 대인도 제조업 (한) 화학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 (인) 화학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료: 본 연구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1) 한·인도 통상협력의 여건

● 한국과 인도는 서로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경제협력 파트너

- 한국은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을 계기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형성한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의 다변화 필요성, 그리고 아세안을 넘어선 무역투자 확대와 다변화 측면에서 인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높음.
- 인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젊은 인구층을 보유한 국가로서, 제조업 성장을 통한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
 - 인도의 제조업 육성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의 기회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과 인도 양국의 강점을 고려할 때, 협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 인도가 육성을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아세안과의 높은 무역·투자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바, 인도의 대아세안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인도는 거대시장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있으며, IT, 연구개발, 사업서비스 등 우수한 서비스산업을 보유
 - 제조업 측면에서도 섬유·의류, 가죽, 화학, 코크스 석유정제, 철강 등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매우 높음.
 - 또한 인도는 미국 및 EU 등 선진국, 그리고 아세안,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다각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

● 무역불균형과 무역장벽 등 한·인도 협력의 걸림돌이 존재

- 지속적인 투자와 ODA 등을 통해 인도와 포괄적인 협력을 진행해온 주요국들에 비해 한국은 대인도 협력의 역사와 자원이 떨어짐.
 - 또한 주요국들에 비하면 인도에 대한 투자 분야가 제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위험요인
 - 이러한 국가들은 인도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며, 인도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원유, 금)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
- 한·인도 무역불균형과 인도의 무역장벽은 양국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
 - 한·인도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인도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지체된 바 있음.
 - 최근 인도의 관세율은 높아지는 추세이며, 무역구제조치 역시 강화되고 있고, CAROTAR 2020

조치 도입 이후 원산지 증명 강화와 이에 따른 통관 지연이 무역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

2) 한·인도 통상협력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 과제

● [중장기 목표]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대인도 통상협력의 목표로서 ① 인도시장 진출 확대와 다변화 ② 인도와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

-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인도의 다양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주요국들은 인도의 국내수요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
- 또한 한국은 인도와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호혜적인 산업협력을 추진할 전략적 필요성이 높음.
 - 한국은 국내에서는 혁신을 통한 신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신남방지역과는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호혜적인 산업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면서 GVC상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의 니즈에 부합함.
 - 인도의 GVC상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며, 아세안과 인도를 연결하여 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네트워크 운영을 생각할 수 있는바, 이런 가능성까지 공유하면서 협력을 진행해야 함.

● [추진 과제] 이상의 목표하에서 대인도 통상협력의 세 가지 추진 과제로서 ① 무역불균형 관리와 무역 확대 ② 투자 진출 다각화 및 확대 ③ 인도와의 제조업 연계성 강화를 제안

- ①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 관계를 확대·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대응
 - 한·인도 CEPA가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한·인도 CEPA의 효과성을 개방화 확대의 관점에서 재검토
 - 인도의 무역장벽, 특히 관세 인상 추세와 무역구제조치, 원산지 검증 규정 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상시적인 정보교류와 협의가 필수적
- ② 제조업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확대는 인도시장 진출의 주요한 방향
 -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는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일부 제조업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
- ③ 한국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중심의 제조업 투자 배치를 효율화하고, 미·중 갈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한·아세안 생산 네트워크를 인도로 확장시킬 필요
 - 인도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인도 경제 및 수출에 대한 기여도이며, 이는 한국이 인도의 핵심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

- 인도는 동남아시아와 생산연계성을 강화하는 추세로서, 예컨대 한국은 베트남산 중간재를 활용한 인도에서의 최종재 생산·수출과 같은 방식의 3국간 생산 네트워크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3) 한·인도 협력방안

● [한·인도 CEPA 개선] 무역불균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양국 무역 활성화에 보다 기여하도록 한·인도 CEPA의 개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중요

- 인도의 국내수요가 높아지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의 개방 수준을 높일 필요
- 중간재 등의 대인도 수입을 고려하여 양방향 생산 네트워크 강화
 - 미국과 독일은 한국과 비교하여 석유정제업, 기타 제조업,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제조업 등의 분야에 걸쳐 인도산 중간재 수입 활용에 적극적
- 경제협력 분야를 현재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으로 다양화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한 플랫폼으로 격상

● [투자 진출과 현지화] 투자를 선행시키면서 진출 및 협력 영역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
 - [분야] 최근 대인도 투자는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심화 및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 [방법] 온라인 소매, 정보통신서비스, 석유/가스, 운송/인프라, 금융, 부동산,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인도의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에서 한국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는 과소한 상황
- 투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정부가 선제적, 지속적으로 제시

글상자 1. 2015년 일·인도 협력 논의 주요 내용¹⁵⁾

- 2015년 4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의 25개 기업 대표와 함께 인도에 방문하여 인도정부와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및 협약을 체결
 - 인도에 일본의 신칸센(고속철도) 시스템을 적용 및 개발할 것을 제안
 - 정보기술(IT) 협력 및 개발: 일본정부는 인도 IT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
 - 안드라 프라데시주 정부와 함께 전력 인프라,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 등 협약
 - 석유 및 천연가스 조달 협력
 - 공공 및 민간 투자/통상 촉진(India-Japan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Action Plan) 협약 체결
- 이 외에도 양국은 인도-일본 에너지 포럼, IT-BPM 포럼 등을 개최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조

15)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15), "METI Minister Miyazawa Visited India,"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5/0501_02.html(검색일: 2021. 2. 24).

하면서 인도정부의 무역·투자상의 지원을 받는 방식의 접근도 유효할 것으로 보임(글상자 1 참고).

● [신산업 분야 협력·투자 확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인도는 한국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산업혁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바,¹⁶⁾ 신산업은 양국의 수요가 부합하는 영역
 - 신산업 분야 협력은 2018년 한·인도 정상외의 공동 비전 성명(Joint Vision Statement)에 포함 된 바 있으며,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는 5G, AI 등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비대면 비즈니스 등 미래 신산업(future industries) 분야를 7대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로 설정*
 - * 한국의 대인도 지식 및 지적재산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양국 협력의 긍정적인 신호
 - 한·인도 미래전략그룹, 스타트업 펀드, 기술교류센터, 한·인도 스타트업 센터 등을 통해 미래 산업 육성, 공동 기술개발, 스타트업 협력,¹⁷⁾ 디지털 제도 및 기술 표준 정립¹⁸⁾ 등 협력과제 구체화

● [ODA 연계 투자 추진] 최근 인도가 한국을 ODA 협력국으로 포함시키고, 한국 역시 인도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것은 양국 협력 강화의 계기

- 한국은 대인도 ODA 경험과 자금력 측면에서 주요국에 뒤처지나, 인도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면¹⁹⁾ 한국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대인도 ODA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
 - 인프라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이며, NIP(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의 주요 투자 부문은 에너지, 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등으로서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개방
- 제3국에서의 한·인도 협력 역시 주목할 만한데, 인도는 아프리카, 중동 등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여 이와 관련한 협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인도에서 개최된 제52회 AfDB 연차 총회에서 인도와 일본은 공동 비전인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AGC)’ 구상을 발표, 양국은 아프리카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IT 분야 협력을 강화

16) Kumar, Mohan(2021),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and India: Progress and Way Forward,” Kwon Hyung Lee and Yoon Jae Ro eds.,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Progress and Way Forwar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7) 한·인도 스타트업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형민 외(202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18) 인도의 디지털 제도 및 표준은 최근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어 양국의 정보교류 및 정책대화가 시급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곤 외(2020),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19) 인도정부의 Economic Survey 2017-18에 의하면, 인도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5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Ministry of Finance(2018), Economic Survey 2017-18, p. 12(검색일: 2021. 7. 30).

- [정례적인 한·인도 통상정책 대화 채널 운영] 최근의 경제 및 통상정책의 이슈를 상호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무역구제 협의 채널(2018년 도입), 분야별 한·인도 경협 채널이 운용되고 있지만, 폭넓고 정례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통해 서로의 주요 경제, 산업, 통상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²⁰⁾
 - 인도의 민간, 산업, 정부의 수요를 중심으로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
 - 주요국의 대인도 생산 연계는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보다는, 인도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며, 따라서 인도 내부 수요의 면밀한 파악이 중요
-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및 한·인도 협력기금 도입]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및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
 -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 한·인도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지원
 -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
 - 또한 정례적인 기업실태조사 역시 상기 이니셔티브 및 기금을 통해 추진할 필요
- [한·인도 관계자본 확대]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양국의 상호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자원 투입을 배가해야 함.
 -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인도 담당자 및 현지 파견자 확충
 - 정부 및 기관 차원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인도 내 거점 확대
 -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인도에서도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데 크게 기여 **KIEP**

20) 인도와 미국은 2021년 9월 쿼드 정상회의 시 정례적인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